

전남도, 국회 예산심사 총력전...미래산업·지역균형발전 호소

강위원 부지사, 예결특위·상임위 잇단 방문

우주·에너지·산업전환 등 국고 증액 건의

전남도가 국회 예산심사 국면에 맞춰 지역 핵심 현안사업의 국고 증액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를 잇따라 방문하며 지역 주요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직접 설명했다.

강 부지사는 이날 한병도 예결위원장,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장, 황정아·김한규·정진욱 예결위원, 조정식 위원 등을 차례로 만나 전남이 추진 중인 우주·에너지·탄

소중립·해양관광·산업전환 등 미래 신성장동력 분야의 예산 지원 필요성을 강하게 건의했다.

이번 일정은 지역구 의원 대상 건의활동에 이어 상임위 및 예결특위 차원의 중역 반영을 위한 '2단계 대응 전략'으로 추진됐다.

강 부지사는 한병도 예결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국립 김산읍진흥원 설립 마스터플랜 수립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한 '2026 섬 방문의 해' 추진 등 13건의 주요

사업을 설명하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의 증액 반영을 요청했다.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장에게는 △한국형 해상풍력(K-WIND) 실증사업 △생물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순환형 매립시설 정비 △여수 도원사거리·국동지구 하수도 정비사업 등을 건의했다.

또 황정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게는 △민간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 시험시설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전시시설 개선 △국립 나주 에너지 전문과학관 건립 △호남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 등 4건의 과학기술 관련 사업을 설명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한규·정진욱 의원에게는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시범산단 조성 △지역산업

위기 대응 R&D △화학산업 고부가가치 소재 전환 및 가스화 기술 개발 △철강·금속산업 인공지능전환(AI) 지원센터 구축 등 핵심 산업정책을 집중 건의했다. 특히 여수·광양산단을 중심으로 한 석유화학·철강 산업의 고도화와 탈탄소 전환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선제적 연구개발 투자를 요청했다.

전남도는 이번 예결특위 면담을 시작으로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 심사 단계까지 '현장 중심·논리 중심'의 대응체제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강위원 부지사는 "전남의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를 잇따라 방문하며 지역 주요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직접 설명했다.

조계원, 석화산단 구조개편 걸림돌 제거 촉구

정부, 전기료 인하 등 검토 약속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여수·사진)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에서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여수 석유화학사업 단지 위기 대응과 사업재편 지원을 촉구하며, 전기요금·공정거래법·세제·연구개발(R&D) 등 사업재편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해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조계원 의원은 "여수석유화학산단은 국내 에틸렌 생산량의 절반을 담당하는 핵심 산업단지임에도, 생산·고용·지역경제가 동시에 붕괴하고 있다"며 "정부가 '선 자구노력·후 지원'만을 반복할 게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제도를 먼저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수산단은 전방위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생산액은 전년 대비 10.4% 감소, 수출은 13.9% 감소, 주요 NCC 4사 가동률은



70%대로 떨어졌다. 실업급여 신청 건수는 44.1% 증가했고, 플랜트건설노조 조합원 수는 전년 대비 61.1%나 급감했다.

조 의원은 "여수 시내까지 폐업이 줄을 잇고 있다. 지역경제가 사실상 붕괴 직전 단계"라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절박하게 호소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산업위기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전기요금 인하가 가능하다"는 조 의원의 요구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정부가 기업에게 자율적 구조조정만 요구할 게 아니라, 제도적 장애물을 치워줘야 한다. 지금 필요한 건 구체적인 반복이 아니라 구조개혁의 유연성"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취지에 공감한다. 빠르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7일 영광군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제63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시군 소방서장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전남소방본부, 도민 안전 문화 확산 다짐

영광서 전남 최초 도 단위 소방의 날 기념식

전남도는 7일 영광 예술의전당에서 '제63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을 열고, 도민 안전문화 확산과 미래형 소방체계 구축을 다짐했다.

이번 행사는 전남에서 처음으로 도 단위로 열린 소방의 날 기념식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헌신한 소방공

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유공 도민들의 노고를 기리고 소방의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유공기관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식전에는 영광군

난타 및 맨스틱의 공연이 펼쳐졌으며, 국민의례와 대통령 축하 영상 상영, 소방유공자 포상, 전남소방 홍보영상 상영 등이 이어졌다.

전남소방은 이날 행사에서 도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참석자들은 재난 현장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의 사명감을 되새기며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을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김영록 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재난 현장에서 헌신

하는 소방가족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 AI 기술을 소방 분야에 적극 접목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 전남을 만드는 데 전남도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영국 전남소방본부장은 "이번 기념식은 도민의 신뢰 속에 성장해온 전남소방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광주시 행정사무감사

정다운 "영유아 가정 교통비, 구마다 제각각"

강수훈 "AI 2단계 사업, 기술인력 배불리기"

광주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영유아·다자녀 가정의 교통비 지원이 자치구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다운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 2·사진)은 지난 7일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광주시는 '아이키움 을 인(AI in) 광주'를 비전으로 51개 저출생 대응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임산부·영유아·다자녀 가정의 교통비 지원은 자치구별로 편차가 크다"며 "광주시 차원의 통합 지원체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광주 5개 자치구 중 동구·서구·북구는 자체 조례를 통해 교통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동구는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0~24개월) 대상 '동구 맘택시'에 5500만원, 서구는 둘째 이상 가정 대상 '아이들맘행복택시'에 5000만원, 북구는 영유아 가정



(0~24개월)을 대상으로 '아이맘교통비'에 1억원을 편성했다. 반면 광산구와 남구는 관련 제도와 예산이 없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특히 아동 인구가 많은 광산구의 경우 그 공백이 더욱 크다.

정다운 의원은 "거주 지역에 따라 교통비 지원이 달라지는 것은 출산·양육친화 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임산부 교통비 지원부터 시작해 향후 영유아와 다자녀 가정으로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광주시 내 모든 가정이 주거지와 관계없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기 기자 sky@

광주시가 6000억원 규모의 'AI 실증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착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AI' 구현보다는 기술개발 중심으로 차우친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수훈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 1·사진)은 지난 7일 광주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 규모 6000억원 중 대부분이 R&D에 집중돼 특정 연구기관과 기술인력만 배 불리는 구조로 설계된 계획서를 보고 참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달까지 광주를 믿고 업무협약한 AI 기업이 이미 337곳에 달한다"며 "광주의 비전을 신뢰한 기업들이 느낄 탈감이 얼마나 크겠느냐"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최근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 실패와 관련해 "이미 예견된 결과였



다"고 꼬집었다.

그는 "센터 부지로 광주가 배제되기 두 달 전에 전력과 용수 공급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시로부터 '자료 없음'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는 행정이 얼마나 준비 없이 프로젝트를 추진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제라도 유치 실패의 원인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가급 AI 인프라 제도전에 대비한 종합적 대책과 행정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AI 중 심도시 광주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장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서구 골목상권 활성화 '전국서 인정'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서 국무총리상 수상

광주 서구가 추진 중인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이 전국 지자체 혁신 모델로 인정받았다.

9일 서구에 따르면 최근 열린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골목상권 혁신모델 구축'으로 전국 지자체 최우수 정책해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 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원,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 단체장과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48개 지방자치단체가 우수정책을 발표하고 26개 지자체가 국무총리·국회의장·행정안전부장관상 등을 수상했다.

서구는 지역경제 회복의 해법을 '골

목상권'에서 찾아 주목을 받았다. '행정·상인·주민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서구 성공의 핵심 요인으로 평가됐다.

전국 최초로 지역 전체를 골목형상 점가로 지정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카페·식당·병원·주유소 등으로 대폭 확대해 주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서구는 기본 합인 10%에 페이백 이벤트까지 최대 20% 할인혜택으로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를 꾀한 결과 상인들의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실제 서구민들은 올해만 약 100억원 이상의 생활비 절감 효과를 체감했다.

윤용성 기자 y01404@